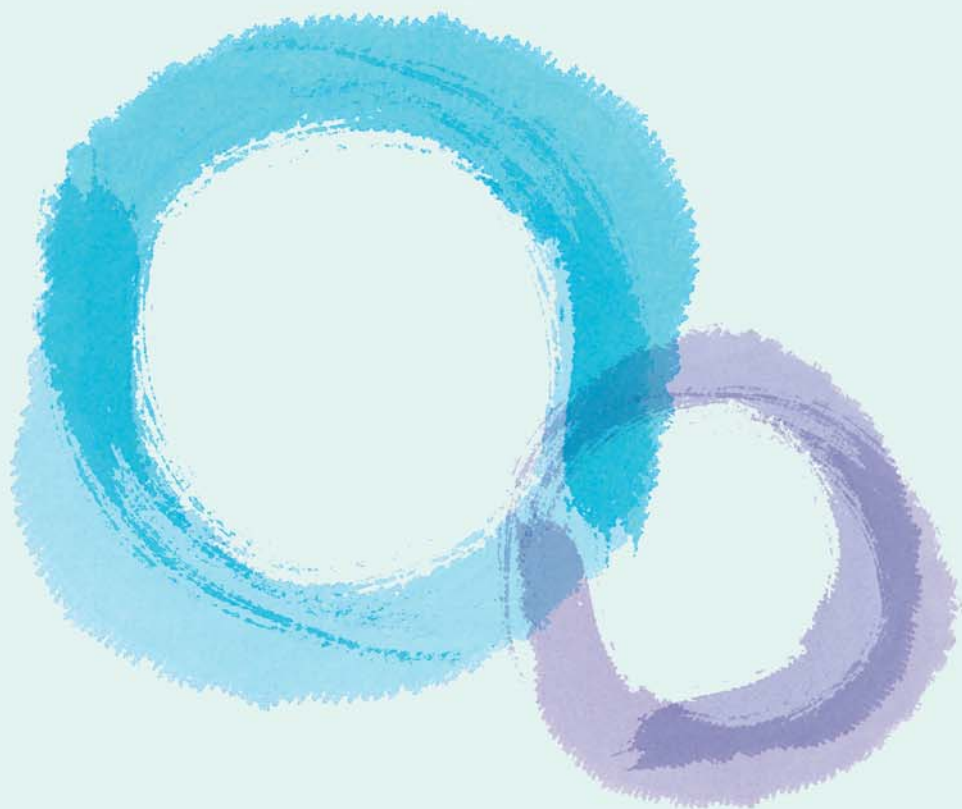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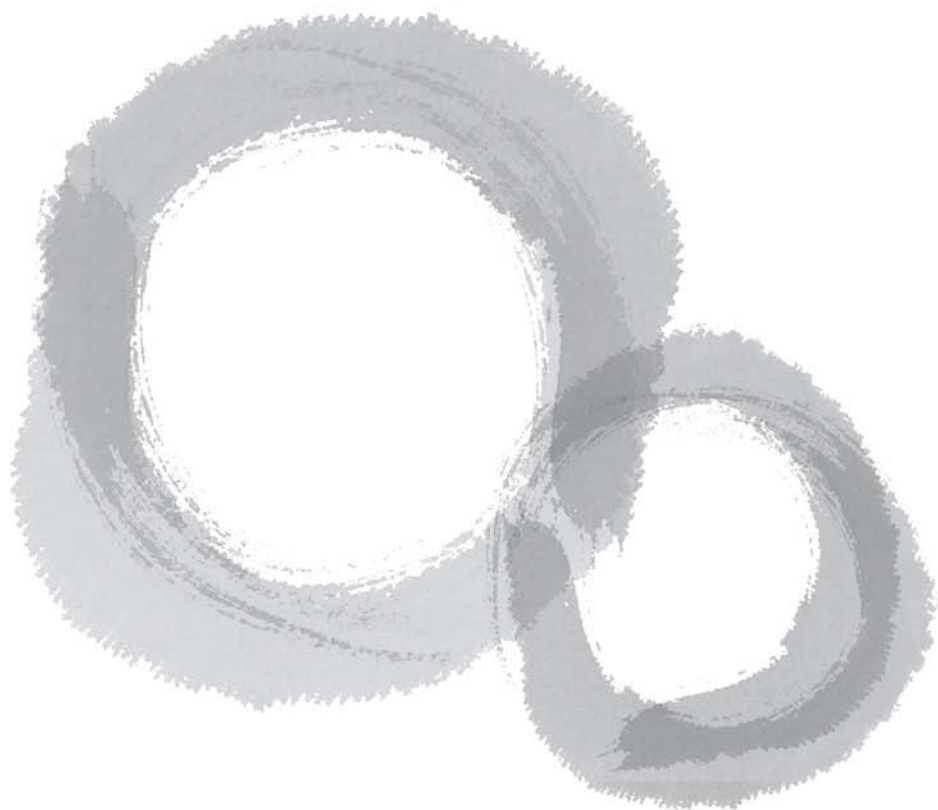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01-18	기업가적 창업 및 제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노동통계연구실장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보윤 호서대학교 교수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원 장 이 인 재

요 약

I. 기업가적 창업활성화정책의 재구축 필요성

창업활성화는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창조경제의 정의는 대체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창업, 특히 기업가적 창업과 맥을 같이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비전으로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도 벤처창업 및 기업가 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 스쿨과 미국의 뱍슨 칼리지, 카우프만재단에서 공동 연구하여 발표하는 GEM 보고서(2009)에 따르면 1인당 GDP 규모가 3만 달러를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창업활동과 1인당 GDP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서 3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창업 활동 촉진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서의 역할이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즉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기업들 뿐 만아니라 전 사회구조나 교육기관까지 Entrepreneurship과 창업을 강조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과 지식창업 촉진에 국정 과제의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39세 미만의 청년 신설법인수와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업의 내용면에서 보면 질적 전환이 필요함을 요구받고 있다. 즉, 산업별 창업기업수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도소매업이 25.1%, 숙박 및 음식점업이 27.4%로 전체 창업기업수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가적 창업보다는 여전히 생계형 창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 가입국의 경우 생계형 창업비중이 30%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기술형 창업 즉 기업가적 창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업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을 갖고 사업에 뛰어들어 일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지만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고 부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때 부도를 내고 사라진 기업의 수는 1만 7천사, 다음 해인 1998년에는 2만 3천사가 부도로 쓰러져 2년 동안 무려 4만사에 이르는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또 위기를 극복한 199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부도업체수도 거의 5만사에 이른다.

부도기업은 실패한 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실패기업은 부도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부진의 이유로 폐업을 한 기업도 실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2011년 한해에만 41만사, 법인만을 보아도 2만사에 이르고 있다.

부도나 폐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쏟아 부어 창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업이 뜻대로 안되어 부도나 폐업에 이르게 되면 하루 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사회적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기술력과 영업망 등이 손실되고 값비싼 설비가 가동을 멈추거나 고철 값에 팔리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손실이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도나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면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의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부도가 나면 재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실패자에게 가혹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도 주요 원인이다. 실패시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창업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적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실패자에 대한 제도적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창업후 실패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은 사회적 가치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관련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실무경험을 쌓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창업실패경험을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실패로 부도 또는 연대보증제도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없고, 취업도 할 수 없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패 시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가적 창업이 위축되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가적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창업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창업마인드의 확산, 창업교육훈련의 내실화, 창업과 취업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창업과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II. 창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정책과제

1.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후 기업 생존율 제고를 통해 시스템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수 뿐만 아

나라 2년 또는 3년 이내의 창업유지율도 정책 목표로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창업 후 3년까지 창업아이템 검증과 판로개척을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지원 정책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 아이템 디자인 센터(Idea Design Factory) 사업이 필요하다. 창업 아이템 진단 사업이란 창업 전(사업자 등록전)에 창업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사업 타당성 점검 및 소비자 연계 및 투자자 유치 예약 후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아이템 디자인 센터(Idea Design Factory) 사업의 지원 내용은 1) 창업 사업 컨셉 검증, 2) 비즈니스 모델 검증, 3) 사업 아이템 타당성 검증, 4) 잠재 소비자 검증(시장성), 5) 잠재 투자자 연계 들이다.

셋째,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 보육센터의 보육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의 창업전문가 집단과의 전국적인 단위의 협업을 통해 보육 업무 전문성 제고 및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넷째,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창업 Boom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엔젤 투자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를 및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제

□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

준비가 안 된 창업으로 실패자만 양산하는 현재의 창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구 쪽에서 패자부활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입구 쪽에서 체계적인 창업훈련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창업훈련을 통해 취득한 기업가정신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에게는 창업교육은 더욱

더 필요하다. 대학 커리큘럼에서 창업교육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다양한 분야의 창업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창업인프라와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기술 교육 훈련과정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중 ‘기획 포착 교육’과 ‘기술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 ‘소비자 수요 조사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기술 습득 교육에서 그 기술을 활용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 검증 교육으로 확대하면 기술 교육 훈련 과정에서 얻게 된 사업 기회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업마이스터제의 도입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에 앞서 창업에 필요한 숙련을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종업종의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가령 5~10년)하고 소정의 창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창업마이스터’의 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을 이들에게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업마이스터’를 통한 경력형 창업의 활성화는 창업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높은 생애보상을 기대하는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효과적이다. 당장 줄 수 있는 보상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우수인력이 올 수 있게 하려면 미래비전을 통한 생애보상이 중요하다. ‘창업마이스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창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큰 지원을 한다면 높은 생애보상을 기대하면서 창업을 위한 훈련의 장소로서 중소기업에 입사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이들은 중소기업 근무기간을 사업준비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업무에 임할 것이고 이는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일자리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기업, 연구소기업의 전면 활성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창업의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인데,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는 기술창업이나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성장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대학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 대한 지원도 예컨대 대학에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평가에 대학의 교수창업과 학생창업으로 매년 창출된 일자리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 등 창업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렇게 창업지향적으로 바뀐 대학이나 출연연구소가 제대로 된 창업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창업교육은 강의실보다는 실제의 사업경험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대학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성장의 기술창업과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기업의 활성화는 현재 연구중심대학도 아니고 교육중심대학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을 교육중심대학 내지는 기업지향대학으로 전환시키는 핵심동력으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창업자 이력시스템과 창업아이템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혹은 고성장기업을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며 정책지원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창업자의 이력과 활동정보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창업자 이력DB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의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우수인력 유입의 필요조건이고, 공개된 창업자 이력DB는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자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정보공

개와 정책지원을 연계하여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기업형태로 창업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가들에게 동기부여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창업성공모델DB의 구축도 필요하다. 창업가능한 산업은 제조업, IT, BT산업뿐만 아니라 뷰티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문화산업, 복지서비스산업 등 무궁무진한 만큼 제조업과 ICT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고성장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창업기업형태도 전통적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LLC, 커뮤니티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정보 및 성공사례 DB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창업정보와 창업성공모델 DB의 구축은 창업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시

창업실패자 또는 재창업 희망자가 취·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노동시장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창업 및 재도전을 위한 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이 아닌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유관분야로의 취업알선 등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추어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고용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취·창업성공 수당 지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패자부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패의 이전, 전후, 이후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실패기업인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재기에 필요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부도나 폐업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위기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보호기능을 제공함과 아울러, 불가피하게 부도나 폐업을 맞이한 중소기업인에게는 재기에 필요한 전문

적 조언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실패 중소기업인이 취업이나 사업재개에서 현실적 장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을 장애인 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인건비 및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당면한 생계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실패 중소기업인끼리 함께 사업하는 경험을 통해 기존의 경영실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재기에 필요한 본격적인 자금지원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보가 축적되고 실패요인이 보완되었다고 인정된 기업인에 대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창업을 하여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실패의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실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업경험을 살려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경험과 중소기업의 혁신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창업경험 활용형으로 재구축하여 관련 분야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romoting business start-ups is highly important in the interest of building creative economy. Creative economy is generally defined as “Creating new value-add and new jobs by combining different industries as well as industries and culture by establishing creativity as the core value of economy and conv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with ICT.” This is in line with business start-ups, especially entrepreneurial start-ups.

Amidst market uncertainties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nsuing European fiscal crisis, securing new growth drivers and creating new jobs have become priorities in the Korean government’s national agenda. Since then, the number of corporations and ventures founded by young people under 39 has steadily increased. But in terms of business categories, more than half(52.5%) of them are either in retail/wholesale(25.1%) or hotels/restaurants(27.4%) as of 2010. This is indicative of a high share of business start-ups for sustenance purposes rather than for entrepreneurial value-add. Given that for-livelihood start-ups among OECD members are around 30%, the share in Korea is excessively high, implying the need to increase policy support for technical start-ups, or entrepreneurial start-ups.

To promote entrepreneurial start-ups,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ies that can embrace failures by ensuring opportunities to try again. Start-up failures can be an important asset, one that should be turned into social values.

Seen from this light, it demonstrates the need to shift the policy focus. To improve the start-up success rate, it is still important to provide start-up consulting but also important to spread a entrepreneurial mindset, improve the quality of start-up education

and training, and create organic links between start-up programs and labor market policies by building a virtuous cycle between business start-up and employment.

This study presents four recommendations as labor market policy tasks to promote entrepreneurial start-up and retry opportunities: first, to increase training and education designed to enhance start-up capabilities; second, to introduce start-up meister programs; third, to grant full permission for school-based enterprises or lab-based enterprises; fourth, to build information systems for entrepreneurs' bio and potential start-up products; last, to introduce a successful start-up package program.

목 차

요 약	1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7
1.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	17
2. 기업가적 창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18
3. 창업실패 후 재도전에 대한 기회부여의 필요성	21
제 2 절 연구의 내용	25
제 2 장 창업의 실태와 창업생존율	26
제 1 절 유형별 창업실태와 창업의 고용창출	26
1. 유형별 창업 현황	26
2. 창업기업의 고용 창출 현황	29
제 2 절 벤처기업 실태	31
1. 벤처기업 현황	31
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35
3. 정부 정책자금 활용 현황	36
4. 벤처기업의 종사자 특성	38
제 3 절 창업생존율	40
제 4 절 창업 실태의 문제점	44
제 3 장 창업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46
제 1 절 창업지원정책의 현황	46

1. 창업 역량 강화 정책	46
2. 창업 성공률 제고 정책	47
3. 재도전 활성화 정책	51
제 2 절 창업지원정책의 한계	51
1. 창업의 질적 측면의 한계	51
2. 창업교육의 성과 목표 및 운영 미흡	53
3. 창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정책의 미흡	54
제 3 절 외국의 재창업지원제도와 시사점	57
1. 미국의 재창업 지원 제도	57
2. 일본의 재창업 지원 제도	57
3. 독일의 재창업 지원 제도	58
4. EU의 재도전 지원 정책	59
제 4 장 창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정책과제	60
제 1 절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0
제 2 절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제	63
1.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	63
2. 창업마이스터제의 도입	65
3. 학교기업·연구소기업의 전면 활성화	66
4. 창업자 이력시스템과 창업아이템 정보시스템 구축	67
5.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시	68
참고문헌	71

표 목 차

〈표 1-1〉 혁신형 기업과 비혁신형 기업 수 추이	21
〈표 1-2〉 폐업사유별 폐업자 현황	22
〈표 1-3〉 미국내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24
〈표 2-1〉 연도별 창업 기업 수	27
〈표 2-2〉 혁신형 기업과 비혁신형 기업 수 추이	27
〈표 2-3〉 산업별 창업기업 비중 변화: 2001~2010	28
〈표 2-4〉 연도별 고용 추이	29
〈표 2-5〉 기업당 평균 고용 추이	30
〈표 2-6〉 유형별 벤처기업 수	31
〈표 2-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정의(기준)	31
〈표 2-8〉 벤처기업 월별 증감현황 및 연도별 누계	32
〈표 2-9〉 지역별 벤처기업 수	33
〈표 2-10〉 업종별 벤처기업 수	33
〈표 2-11〉 매출 규모별 벤처기업 수	34
〈표 2-12〉 업력별 벤처기업 수	34
〈표 2-13〉 연도별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수	34
〈표 2-14〉 2011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성과 비교	35
〈표 2-15〉 2011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재무현황 비교	35
〈표 2-16〉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혜택 현황	37
〈표 2-17〉 벤처기업 인력 규모 현황(2011년)	38
〈표 2-18〉 벤처기업 근로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 인력 현황(2011년) ...	39
〈표 2-19〉 창업기업의 생존율 추이	41

〈표 2-20〉 서비스업종의 평균 생존율 추이	42
〈표 2-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현황	43
〈표 2-22〉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	45
〈표 3-1〉 연도별 비즈쿨 선정 학교 수 및 지원 대상 수	46
〈표 3-2〉 연도별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수 및 성과	47
〈표 3-3〉 World Bank 평가 창업 환경 순위	48
〈표 3-4〉 재택창업 시스템 활용한 창업기업 수	48
〈표 3-5〉 창업 선도 대학 3개년 예산 및 창업율	49
〈표 3-6〉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성과	50
〈표 3-7〉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지원 규모	53
〈표 3-8〉 BI 입주기업의 사업화 성과	53
〈표 4-1〉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핵심 역량	61

그 립 목 차

[그림 1-1]	경제발전과 창업활동의 상관관계(GEM Global Report 2009) ...	18
[그림 1-2]	신설법인 수와 39세 미만 신설법인 수의 추이	19
[그림 1-3]	벤처기업 수 추이	19
[그림 1-4]	부도업체 연도별 추이	21
[그림 2-1]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2011. 12)	36
[그림 2-2]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 규모 및 방법 현황	37
[그림 2-3]	벤처기업 신규채용 희망 학력 현황(2011년)	39
[그림 2-4]	벤처기업 인력 확보 애로 직종(2011년)	40
[그림 4-1]	미국의 제 4세대 창업보육 모델	6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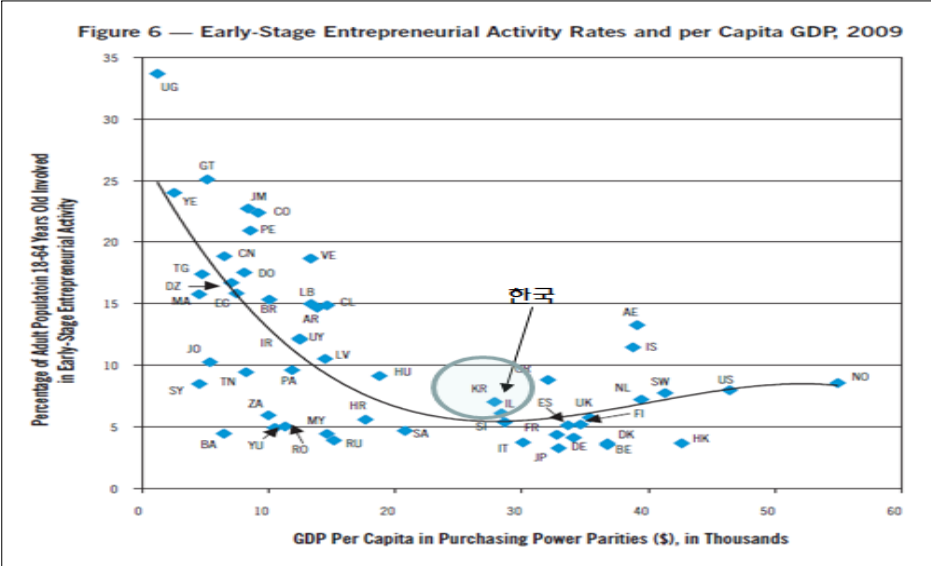
1.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

창업활성화는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창조경제의 정의는 대체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창업, 특히 기업가적 창업과 맥을 같이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비전으로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도 벤처창업 및 기업가 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 스쿨과 미국의 뱀슨 칼리지, 카우프만재단에서 공동 연구하여 발표하는 GEM 보고서(2009)¹⁾에 따르면 1인당 GDP 규모가 3만 달러를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창업활동과 1인당 GDP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서 3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창업활동 촉진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서의 역할이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즉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기업들 뿐 만아니라 전 사회구조나 교육기관까지 Entrepreneurship과 창업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1)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9 Report

(그림 1-1) 경제발전과 창업활동의 상관관계(GEM Global Repor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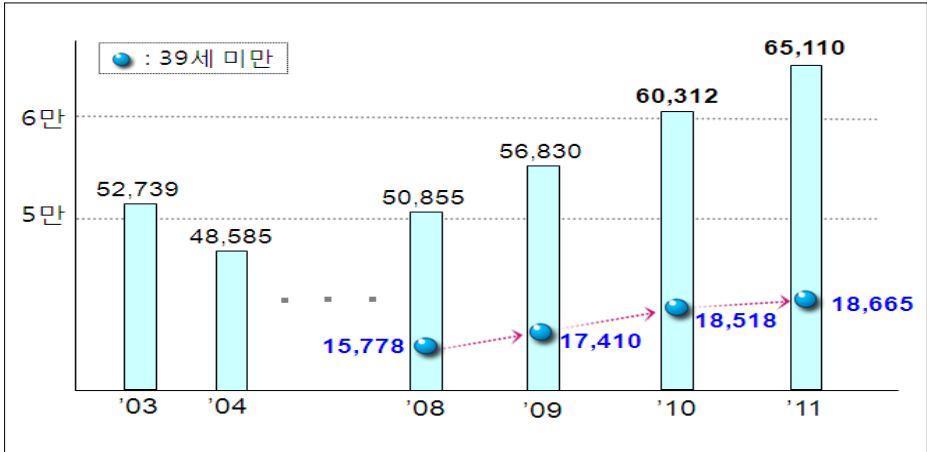


Source: GEM Adult Population Survey(APS) and IMF: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09)

2. 기업가적 창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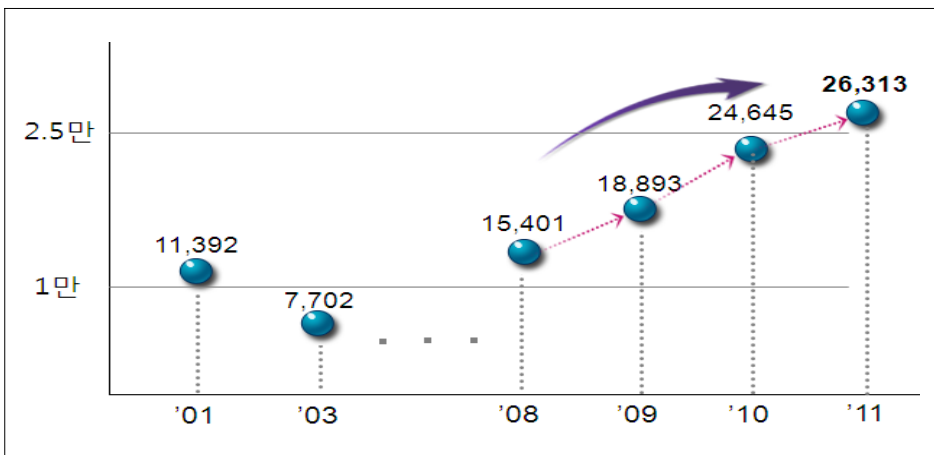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과 지식창업 촉진에 국정 과제의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그림 1-2]와 [그림 1-3]에서와 같이 39세 미만의 청년 신설법인수와 벤처기업 수는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신설법인 수는 연평균 9.35% 증가하였으며, 39세미만 창업자의 신설법인수도 연평균 6.1% 증가하였다. 벤처기업 수는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23.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신설법인 수와 39세 미만 신설법인 수의 추이



자료: 관계부처합동(2012. 5),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 방안’, 보도자료

〔그림 1-3〕 벤처기업 수 추이



자료: 관계부처합동(2012. 5),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 방안’, 보도자료

그러나 창업의 내용면에서 보면 질적 전환이 필요함을 요구받고 있다. 즉, 산업별 창업기업수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도소매업이 25.1%, 숙박 및 음식점업이 27.4%로 전체 창업기업수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가

적 창업보다는 여전히 생계형 창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OECD 가입국의 경우 생계형 창업비중이 30%수준 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기술형 창업 즉 기업가적 창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³⁾ 또한 제조업의 ‘첨단·고기술업종’ 과 1인 창조기업의 ‘전문지식 서비스업’으로 구성하는 혁신형 기업과 그 외 모든 업종(농림수산업, 광업은 제외)을 비혁신형 기업으로 분류해 볼 때 <표 1-1>과 같이 혁신형 기업이 2010년말 기준으로 전체 중 4.3%를 차지하여 비혁신형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회형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정책 방향의 전환이 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2) 창업진흥원(2012a)

- 3) 기업가적 창업이 위축되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창업 인센티브의 약화이다. 저성장, 경쟁심화,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수요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창업을 주저하는 측면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창업과 기업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대기업 납품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로 가격과 물량 양쪽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창업의욕을 저하시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숙련측면으로 창업에 필요한 능력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초·중·고·대학·대학원)에서 창업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 있음’이라는 응답은 14.7%에 불과한 반면 ‘참여한 적 없음’이라는 응답은 85.3%로 나타나 창업에 대한 인식부족도 지적할 수 있다(양현봉·박종복, 2011). 넷째, 창업자와 창업아이템에 관한 정보부족도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창업에는 인력과 자금의 외부조달이 필수적이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창업자에 대한 불신과 정보부족으로 필요한 인력과 자금의 조달이 곤란하다. 창업예비군들의 관심이 혼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창업 아이템에만 집중되어 사회적 필요와 성공가능성이 보다 높은 소셜벤처와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표 1-1〉 혁신형 기업과 비혁신형 기업 수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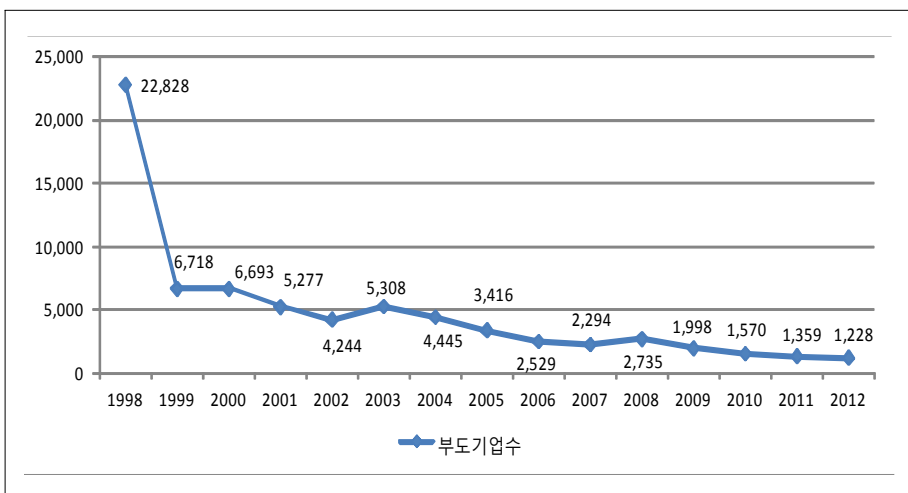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전체	498,706	612,165	515,943	426,649	428,038	437,505	384,836	384,374	401,337	468,105	455,766
혁신형	22,458	25,132	20,357	17,623	18,335	17,843	14,942	13,893	14,599	20,119	18,530
비혁신형	476,248	587,033	495,586	409,026	409,703	419,662	369,894	370,481	386,738	447,986	437,236

자료: 창업진흥원(2012a)

3. 창업실패 후 재도전에 대한 기회부여의 필요성

창업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을 갖고 사업에 뛰어들어 일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지만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고 부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때 부도를 내고 사라진 기업의 수는 1만 7천사, 다음 해인 1998년에는 2만 3천사가 부도로 쓰러져 2년 동안 무려 4만사에 이르는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또 위기를 극복한 199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부도업체수도 거의 5만사에 이른다.

〔그림 1-4〕 부도업체 연도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어음부도율동향』

부도기업은 실패한 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실패기업은 부도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부진의 이유로 폐업을 한 기업도 실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2011년 한해에만 41만사, 법인만을 보아도 2만사에 이르고 있다.

〈표 1-2〉 폐업사유별 폐업자 현황

(단위: 개)

	총계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양도·양수	해산합병	기타
'06년	795,369	473,427	2,734	604	5,307	135		2,420	310,741
'07년	894,776	488,792	5,694	687	6,401	121		2,930	390,151
'08년	844,171	463,155	4,084	651	5,829	139		2,726	367,587
'09년	840,941	461,802	3,777	620	4,828	124		2,588	367,201
'10년	860,335	432,104	3,485	647	4,721	105		1,975	417,298
'11년	897,168	410,233	4,337	518	5,105	144	24,712	2,072	450,047
법인 ('11년)	51,935	19,455	782	8	—	—	575	1,749	29,3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부도나 폐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전 재산을 쏟아 부어 창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업이 뜻대로 안되어 부도나 폐업에 이르게 되면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사회적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기술력과 영업망 등이 손실되고 값비싼 설비가 가동을 멈추거나 고철 값에 팔리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손실이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도나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면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의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부도가 나면 재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전국부도기업인재기협회가 2005년

2월 부도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도 이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예전처럼 기업인으로 재기한 경우는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것은 ‘장사나 행상,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유지’하는 것(60%) 이었고, ‘폐인이나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도 20%,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일하고 있지만 악전고투 중’이 19%였다.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자에게 가혹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부도가 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없고 취업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실직 근로자들에게 주는 재취업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최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기초생활대상자로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 역시 부여되지 않는다. 특히 부도가 나면 회사 채무가 회사대표 채무로 모두 전가되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한번 실패하면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굴레를 안게 된다. 이와 같이 실패시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창업을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적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창업은 성공률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2000년에 창업하여 2010년까지 생존기업 수와 생존율을 보면 창업한지 3년 후에는 약 55%가 생존하고, 7년 후에는 약 32%, 10년 후에는 약 24%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업별 생존율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창업 3년 후 생존율 77%, 5년 후 생존율 62%, 창업 10년 후 생존율이 44%로 전체 창업기업 생존율, 55%, 39%, 24% 보다는 현저한 차이로 높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창업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생존율이 각각 53%, 37%, 22%로 전체 창업기업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업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생존율이 각각 59%, 44%, 28%로 전체 창업기업보다 소폭 높은 편이고, 혁신형기업도 각각 63%, 48%, 32%로 전체

창업기업보다 높다.

창업 후 실패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은 사회적 가치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관련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실무경험을 쌓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창업실패경험을 겪고 있다.

〈표 1-3〉 미국내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단위: %)

창업 중요 요소	비 율
산업계 실무 경력	58
창업 실패 경험	40
창업 성공 경험	39
회사내 경영팀 능력	35
금융 접근성	23
전문가 네트워크	22
행운	22
대학교육	20
개인네트워크	13
사업장 위치	7
투자자 조언	4

자료: Rasmussen College, The Entrepreneurship Road Map, 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활동지수 (Kauffman Index of Entrepreneurial Activity), Business Insider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이윤준 외, 2012에서 인용)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실패로 부도 또는 연대보증제도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없고, 취업도 할 수 없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패 시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가적 창업이 위축되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가적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금융지원이나 창업컨설팅 외에

도 창업마인드의 확산, 창업교육훈련의 내실화, 실패 창업의 재도전을 위한 창업 및 취업지원대책의 강화, 혁신적 창업의 지속화를 위한 창업과 취업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창업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 절 연구의 내용

연구의 필요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적 성격의 높은 창업을 기업가적 창업으로 전환하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창업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특히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통해 현행 창업지원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현황을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부는 그 동안 기업가적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공률에 초점을 맞추고 창업융자, 창업컨설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역량강화, 창업 후 재도전 활성화, 창업실패 이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창업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 2 장 창업의 실태와 창업생존율

제 1 절 유형별 창업실태와 창업의 고용창출

1. 유형별 창업 현황

창업진흥원(2012a)의 자료에 나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창업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창업기업은 2002년도에 612,289개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 384,502개로 최저점을 기록 후 재반등하고 있다 <표 2-1참조>.

전체기업 수 중 창업기업 비중은 지난 10년간 연평균으로 볼 때 15.2%로 나타났다. 업종별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평균 90.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이 6.3%를 차지하고, 건설, 전기·수도 산업이 2.4%, 농림어업, 광업이 0.04%를 차지한다. 규모별로 보면 1인 창업기업이 연평균 175,204개로 전체 창업기업 중 38.4%, 2인 이상 5인 미만이 401,043개로 87.97%, 5인 이상이 53,239개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인 창업기업은 2010년에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지난 10년간 평균 225,092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49.4%, 비수도권이 230,821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50.6%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창업기업 편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별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지난 10년간 평균 424,158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93.0%이며 법인 창업 기업 비중 7%와 비교해 볼 때 기업가적 창업 형태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작은 비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연도별 창업 기업 수

(단위: 개)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기업 수	창업기업	498,857	612,289	516,063	426,752	428,153	437,637	384,964	384,502	401,601	468,305	455,912
	전체 (천개)	2,879.6	2,952.3	3,003.1	2,998.6	2,863.6	2,936.1	3,046.8	3,044.2	3,066.5	3,122.3	2,991.3
산업	제조업	40,098	41,737	31,026	27,712	29,958	26,322	22,411	20,815	21,693	26,317	28,809
	서비스	445,287	555,129	472,770	388,633	387,578	401,317	344,930	346,907	362,642	423,015	412,821
	건설·전기·수도	13,321	15,299	12,147	10,304	10,502	9,866	9,697	8,647	9,145	9,945	10,887
	농림어업, 광업	151	124	120	103	115	132	128	128	264	200	147
규모	1인	189,490	224,121	193,609	153,650	168,045	169,261	146,018	145,990	152,985	208,867	175,204
	5인 미만	425,272	536,608	455,455	375,515	375,771	387,572	338,523	338,439	351,539	425,731	401,043
	5인 이상	57,273	75,681	60,608	51,237	52,382	50,065	46,441	46,063	50,062	42,574	53,239
지역	수도권	239,814	299,547	255,254	206,480	211,088	217,891	192,470	193,197	198,183	236,994	225,092
	비수도권	259,043	312,742	260,809	220,272	217,065	219,746	192,494	191,305	203,418	231,311	230,821
조직	개인	468,946	570,691	484,837	399,346	400,518	406,432	355,041	356,299	367,447	432,025	424,158
	법인	29,911	41,598	31,226	27,406	27,635	31,205	29,923	28,203	34,154	36,280	31,754

자료: 창업진흥원(2012a)

제조업의 ‘첨단·고기술업종’과 1인 창조기업의 ‘전문지식 서비스업’으로 구성하는 혁신형 기업과 그 외 모든 업종(농림수산업, 광업은 제외)을 비혁신형 기업으로 분류해 볼 때 〈표 2-2〉와 같이 혁신형기업이 2010년말 기준으로 전체 중 4.3%를 차지하여 비혁신형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회형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정책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2-2〉 혁신형 기업과 비혁신형 기업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전체	498,706	612,165	515,943	426,649	428,038	437,505	384,836	384,374	401,337	468,105	455,766
혁신형	22,458	25,132	20,357	17,623	18,335	17,843	14,942	13,893	14,599	20,119	18,530
비혁신형	476,248	587,033	495,586	409,026	409,703	419,662	369,894	370,481	386,738	447,986	437,236

자료: 창업진흥원(2012a)

산업별 창업기업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이 2010년 현재 도소매업이 25.1%, 숙박 및 음식점업이 27.4%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가적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의 생계형 창업비중이 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업가적 창업 비중이 확대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표 2-3> 산업별 창업기업 비중 변화: 2001~2010

(단위: %)

산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제조업	8.0	6.8	6.0	6.5	7.0	6.0	5.8	5.4	5.4	5.6	6.3
첨단기술	0.5	0.4	0.4	0.4	0.4	0.4	0.4	0.3	0.3	0.4	0.4
고기술	1.5	1.2	1.1	1.2	1.3	1.1	1.1	0.9	1.0	1.1	1.1
중기술	1.6	1.4	1.3	1.5	1.6	1.4	1.4	1.4	1.3	1.4	1.4
저기술	4.4	3.8	3.3	3.4	3.7	3.2	2.8	2.7	2.7	2.6	3.3
서비스업	89.3	90.7	91.6	91.1	90.5	91.7	89.6	90.2	90.3	90.3	90.5
도소매	27.4	26.5	25.1	25.7	25.2	26.0	25.6	25.7	25.8	25.1	25.8
음식·숙박	29.2	30.7	30.5	29.9	28.4	30.0	29.0	29.3	29.4	27.4	29.4
운수	8.7	7.5	8.6	7.4	8.3	6.8	7.4	6.8	7.2	11.3	8.0
통신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금융 및 보험	0.5	0.6	0.4	0.2	0.4	0.4	0.4	0.3	0.3	0.3	0.4
부동산 및 임대	3.4	4.3	5.2	4.9	4.8	5.6	5.2	5.1	4.8	4.1	4.7
사업서비스	2.4	2.6	2.6	2.6	2.6	2.7	2.7	2.7	2.9	3.1	2.7
교육서비스	3.4	3.7	4.1	4.2	4.8	4.8	5.0	5.3	5.2	4.7	4.5
보건 및 사회복지	1.5	1.4	1.6	1.7	1.7	1.6	1.8	2.1	2.0	2.1	1.7
오락, 문화운동 서비스	5.1	5.6	5.7	6.2	6.4	5.7	6.3	6.7	6.5	6.0	6.0
기타공공, 수리개인서비스	7.5	7.6	7.6	7.9	7.9	7.8	5.8	6.0	6.1	5.9	7.0
건설, 전기·수도	2.7	2.5	2.4	2.4	2.5	2.3	2.5	2.2	2.3	2.1	2.4
전기, 가스 및 수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	2.7	2.5	2.3	2.4	2.4	2.2	2.5	2.2	2.3	2.1	2.4
농림, 어업·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농업 및 임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어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중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사서비스업’은 2007년~2010년에만 존재하므로 서비스업 합계에서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계산. 산업별 비중은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 창업기업수로 계산

자료: 창업진흥원(2012a)

2. 창업기업의 고용 창출 현황

〈표 2-4〉에서 보듯이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수가 전체 고용창출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간 평균치로 볼 때 12.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고용인원의 추이는 2002년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창업기업의 고용 인원은 2002년에 1,790.1천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다가 점차 하락하여 2008년 1,111.8천명으로 최저점을 기록 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이후부터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2008년 까지 점차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연도별 고용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고 용	창업기업	1,346.8	1,790.1	1,459.3	1,236.5	1,232.6	1,240.9	1,131.4	1,111.8	1,187.3	1,272.9	1,301.0
	전체	8,991.6	10,439.7	10,528.5	10,456.8	10,449.2	10,677.8	11,343.7	11,467.7	11,751.3	12,262.7	10,836.9
산 업	제조업	195.6	227.3	178.1	160.7	167.6	150.8	129.3	108.9	118.3	135.0	157.2
	첨단기술	18.8	25.0	21.2	21.3	20.1	18.7	15.9	8.9	10.2	14.1	17.4
	고기술	41.2	46.7	36.3	35.4	34.5	31.5	26.3	21.4	23.4	30.3	32.7
	중기술	43.6	51.7	44.2	39.6	46.8	43.9	40.1	37.7	40.1	42.6	43.0
	저기술	92.0	103.8	76.3	64.5	66.2	56.6	44.2	38.8	42.8	46.0	63.1
	서비스	1,078.1	1,471.7	1,212.1	1,018.7	1,008.8	1,041.1	936.2	938.0	1,001.1	1,067.1	1,077.3
	건설, 전기·수도	72.3	89.7	67.8	56.0	56.2	47.9	47.0	46.6	48.7	50.0	58.0
	농림어업, 광업	0.7	1.5	1.2	1.1	1.0	1.1	1.2	0.9	1.7	1.4	1.2
규 모	1인	189.5	224.1	193.6	153.7	168.0	169.3	146.0	146.0	153.0	208.9	175.2
	5인 미만	781.5	1,007.3	846.4	708.0	690.2	712.9	628.1	628.1	651.7	763.2	741.7
	5인 이상	565.2	782.9	612.9	528.5	542.3	528.1	503.2	483.7	535.7	509.6	559.2
지 역	수도권	685.3	911.3	749.3	630.5	637.2	646.6	586.7	575.7	607.1	662.6	669.2
	비수도권	661.5	878.8	710.1	606.0	595.4	594.4	544.6	536.0	580.2	610.3	631.7
조 직	개인	1,087.2	1,389.1	1,160.6	967.7	960.6	950.0	854.0	857.4	892.5	959.7	1,007.9
	법인	259.6	401.0	298.7	268.8	272.0	290.9	277.4	254.4	294.8	313.2	293.1

자료: 창업진흥원(2012a)

산업별로 고용 창출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창업기업 전체 고용 창출 수 10년간 평균치 중에서 가장 많은 1,077.3 천명으로 82.8% 차지하고, 제조업이 157.2 천명으로 12.1%를 차지한다. 규모별로 고용 창출수를 살펴보면 10년간 창업기업 평균치로 볼 때 1인 기업은 175.7천명, 2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은 741.7천명, 5인 이상은 559.2명이다.

기업당 평균 고용 창출수를 보면 <표 2-5>와 같이 창업기업 전체 10년 평균치는 2.85명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5.46명, 서비스업이 2.61명이다. 제조업중 고기술과 중기술이 각각 6.32명, 6.55명으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이 1.85명, 5인 이상이 10.5명, 조직별로는 개인기업이 2.38명, 법인기업이 9.23명으로 기업가적 창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기업당 평균 고용 추이

(단위: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창업기업	2.70	2.92	2.83	2.90	2.88	2.84	2.94	2.89	2.96	2.72	2.85
산업별	제조업	4.88	5.45	5.74	5.80	5.59	5.73	5.77	5.23	5.46	5.46
	첨단기술	7.76	10.10	11.49	11.85	10.43	10.52	10.12	7.25	7.33	9.50
	고기술	5.60	6.20	6.67	7.06	6.37	6.86	6.49	6.03	6.09	6.32
	중기술	5.35	6.13	6.52	6.15	6.81	7.15	7.33	7.06	7.39	6.55
	저기술	4.15	4.46	4.51	4.45	4.21	4.10	4.04	3.75	4.00	4.19
	서비스	2.42	2.65	2.56	2.62	2.60	2.59	2.71	2.70	2.76	2.61
	건설, 전기·수도	5.43	5.86	5.59	5.44	5.25	4.86	4.84	5.27	5.32	5.33
	농림어업, 광업	4.72	11.76	9.98	11.02	8.77	8.59	9.32	7.09	6.61	8.09
규모별	5인 미만	1.84	1.88	1.86	1.89	1.84	1.84	1.86	1.86	1.85	1.85
	5인이상	9.87	10.34	10.11	10.31	10.35	10.55	10.84	10.50	11.97	10.50
지역별	수도권	2.86	3.04	2.94	3.05	3.02	2.97	3.05	2.98	3.06	2.97
	비수도권	2.55	2.81	2.72	2.75	2.74	2.70	2.83	2.80	2.85	2.74
조직별	개인	2.32	2.43	2.39	2.42	2.40	2.34	2.41	2.41	2.43	2.38
	법인	8.68	9.64	9.57	9.81	9.84	9.32	9.27	9.02	8.63	9.23

자료: 창업진흥원(2012a)

제 2 절 벤처기업 실태

1. 벤처기업 현황

2013년 2월말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된 벤처기업 유형별 업체 수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이 88.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신기술기업 유형은 2008년 7월말로 없어졌다.⁴⁾

〈표 2-6〉 유형별 벤처기업 수

구 분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예비벤처 기업	합 계
업체수	681	1,441	25,465	1,128	48	28,763
%	2.4	5.0	88.5	3.9	0.2	100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3. 2)

〈표 2-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정의(기준)

요 건	기 준
벤처투자 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 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연구개발 기업	1. 기술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 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 이상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적용 제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4) 변경 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창업기업포함)으로 유형이 분류되었으나 2006년 변경 후 신기술기업에 대한 확인유형은 폐지되었다.

요건	기준
기술평가 보증 기업 및 기술 대출기업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중소기업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2. 상기 1의 신용보증 또는 대출금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① 창업후 1년 미만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② 보증금 10억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국내 벤처기업 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01년 7월말에 일시적으로 1만개를 돌파하였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였고, 2006년 2월부터 다시 1만개를 넘어섰다. 2010년 5월 19일에 2만개(20,044개)를 돌파 후 2013년 2월말 현재 벤처기업 수는 28,763개이다.

월별증감현황을 보면 2002년과 2003년에는 매월 연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연누계액 증가율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141%, 78%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표 2-8〉 벤처기업 월별 증감현황 및 연도별 누계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누계
1998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누계
2009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131	28,193
2013	249	321											28,763

주: 전체누계는 월별증감현황에 누락벤처기업 수 10개를 더한 것임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3. 2)

지역별 벤처기업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21.4%, 30.5%로 전체의 51.9%가 밀집되어 있다.

〈표 2-9〉 지역별 벤처기업 수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세종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6,154	2,592	2,808	1,164	59	1,989	8,776	1,390	469	736	700	1,851	75	28,763
(%)	21.4	9.0	9.8	4.0	0.2	6.9	30.5	4.8	1.6	2.6	2.4	6.4	0.3	100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3. 2)

업종별 벤처기업수를 보면 제조업이 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정보처리 S/W가 15.3%를 차지한다.

〈표 2-10〉 업종별 벤처기업 수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 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	73.0	15.3	1.0	1.4	1.2	0.3	7.8	100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3. 2)

매출규모별 벤처기업수를 보면 10억~100억원 미만이 56.3%로 가장 많고, 1억

~10억원 미만인 27.6%, 100억~1,000억원 미만인 11.6%를 차지한다.

〈표 2-11〉 매출 규모별 벤처기업 수

(단위: 개소/%)

구분	1억 미만	1~10억 미만	10~100억 미만	100~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계
업체 수	922	6,002	12,255	2,531	65	21,775
%	4.2	27.6	56.3	11.6	0.3	100.0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2. 12)

업력별 벤처기업수를 보면 10년 이상이 30.9%로 가장 많고, 5년 ~10년 미만인 26.8%, 1년~3년 미만인 20.9%, 3년~5년 미만인 16.7% 순이었다.

〈표 2-12〉 업력별 벤처기업 수

(단위: 개소/%)

구분	6개월 미만	6월~1년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업체수	406	873	5,681	4,531	7,257	8,371	27,119
%	1.5	3.2	20.9	16.7	26.8	30.9	100.0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2. 12)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판단지표의 하나인 코스닥(KOSDAQ) 등록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10년간 벤처기업수중 코스닥 기업 비율은 2003년 이후 감소하였고,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표 2-13〉 연도별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수

(단위: 개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벤처기업수(A)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코스닥 벤처기업수(B)	353	376	381	369	405	390	335	268	285	295
B/A	3.1	4.3	4.9	4.6	4.2	3.2	2.4	1.7	1.5	1.2

주: 벤처기업 수 및 코스닥 벤처기업 수는 각 연도 말 기준임.

자료: 벤처통계시스템: 코스닥 벤처지수, 중소기업연구원(2012. 12)에서 재인용.

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2011년 대·중소·벤처기업간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수익성 지표는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

〈표 2-14〉 2011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성과 비교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13.1	14.3	10.6	11.7	13.9	14.4
매출액 영업이익률	5.3	6.1	3.1	4.2	4.7	4.8
매출액 순이익률	3.3	4.7	1.6	2.2	2.7	2.6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벤처기업 해당연도 창업기업 제외

자료: 2011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2011년 대·중소·벤처기업간 자기자본비율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전체적으로는 근소한 차이(40.8%, 40.4%)이나, 제조업종에서는 큰 차이(51.9%, 39.6%)로 대기업이 우수함을 보인다.

〈표 2-15〉 2011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재무현황 비교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자기자본 비율	40.8	51.9	35.8	36.9	40.4	39.6
부채비율	144.9	92.6	179.2	171.0	147.3	152.4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벤처기업 해당연도 창업기업 제외

자료: 2011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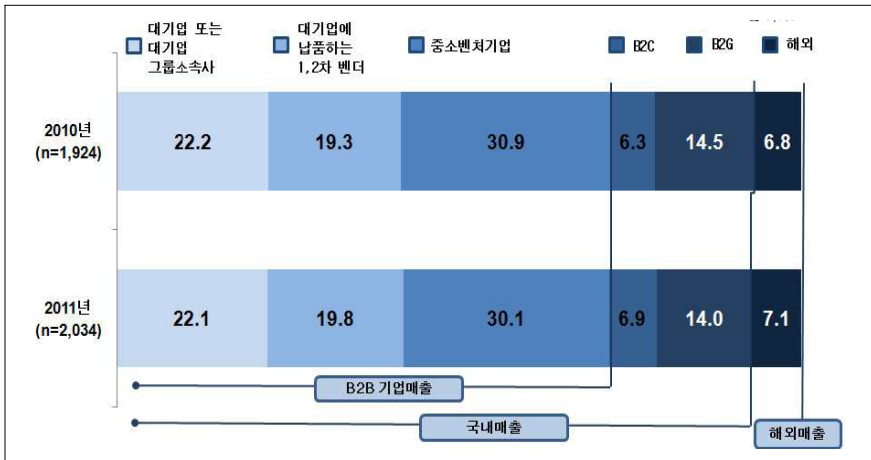
2011년말 기준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상 비중은 B2B 매출이 72.0%로 가장 높고, B2G가 14.0%, 해외 매출이 7.1%, B2C 6.9%순으로 나타난다.

B2B 매출의 구성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대상 거래가 30.1%로 가장 많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 소속사가 22.1%, 대기업 납품 1,2차 벤더가 19.8%를 차지한다. 매출 구성을 통해 볼 때 벤처기업의 41.9%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관련사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독자적인 B2G, 해외 매출, B2C는 28%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 대상 매출비율이 높았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기업 및 대기업 관련사 대상 매출비율이 48.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기업 등의 의존도가 높다((사)벤처기업협회, 2012. 11).

〔그림 2-1〕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2011. 12)

(단위: %)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3. 정부 정책자금 활용 현황

2011년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55.1% 이며, 지원 자금중 보증서 지원(보증서 발급대출) 수혜비율이 54.6%로 가장 높고, 융자(정책 자금)가 27.8%, R&D자금(출연금)이 26.6% 순이다.

수령금액은 보증서 지원이 평균 50,978만원으로 가장 높고, 용자가 49,595만원, R&D 자금 35,273만원 순이다(벤처기업협회, 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2. 11).

〈표 2-16〉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혜택 현황

(N=1,1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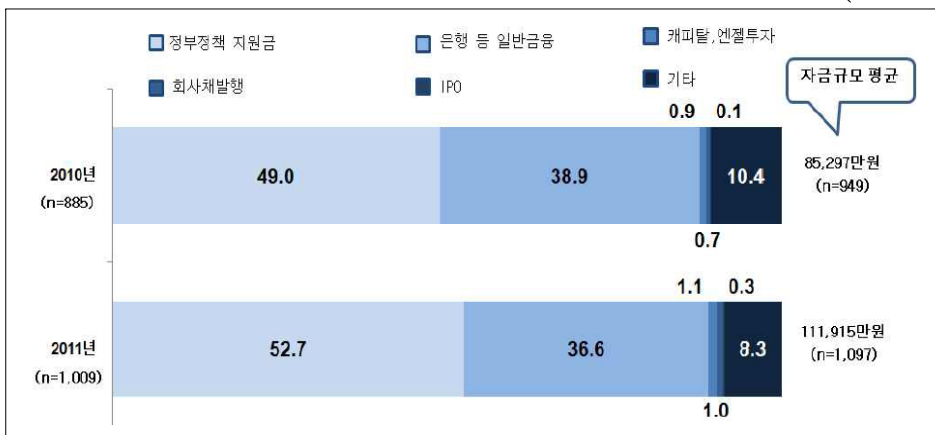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경험 증가율	수령금액 증가율
	경험여부		수령금액 (만원)	경험여부		수령금액 (만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R&D자금 (출연금)	22.7	77.3	28,148	26.6	73.4	35,273	17.2	25.3
융자 (정책자금)	21.2	78.8	43,720	27.8	72.2	49,595	31.1	13.4
보증서지원 (보증서발급대출)	43.1	56.9	40,735	54.6	45.4	50,978	26.7	25.1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2011년도 신규자금 방법은 정부정책 지원금(52.7%)과 은행 등 일반금융(36.6%)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2-2〕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 규모 및 방법 현황

(단위: %)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4. 벤처기업의 종사자 특성

벤처기업의 2011년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5.5명이며, 이중 정규직이 23.4명, 비정규직이 2.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17〉 벤처기업 인력 규모 현황(2011년)

(단위: 명, %)

구분	2010년(n=1,924)			2011년(n=1,924)			'10~'11 전체증가율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근로자수	18.3	6.2	24.5	19.1	6.4	25.5	4.1
정규직 근로자수	17.1	5.3	22.4	17.9	5.5	23.4	4.5
비정규직 근로자수	1.2	0.9	2.1	1.2	0.9	2.1	0.0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벤처기업 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의 직종별 인력구성은 생산직이 11.4명으로 가장 많고, 관리직이 4.6명, R&D 4.4명, 영업직 2.6명, 기타 2.5명 순이다((사)벤처기업협회, 2012. 11). 직종별 부족 인력 수는 생산직이 1.1명, R&D인력 0.7명, 영업직 0.6명, 관리직 0.4명, 기타 0.2명 순이다. 벤처기업의 근무인력 대비 부족 인력 비율을 살펴보면, 영업직이 23.1%로 가장 높고, R&D인력 15.9%, 생산직 9.6%, 관리직 8.7%, 기타 8.0% 순이다. 업종별로 생산직 인력이 가장 많은 가운데, 소프트웨어개발과 통신 기기/방송기기는 R&D인력의 비중이 각각 11.8%, 7.9%로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표 2-18〉 벤처기업 근로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 인력 현황(2011년)

(N=2,03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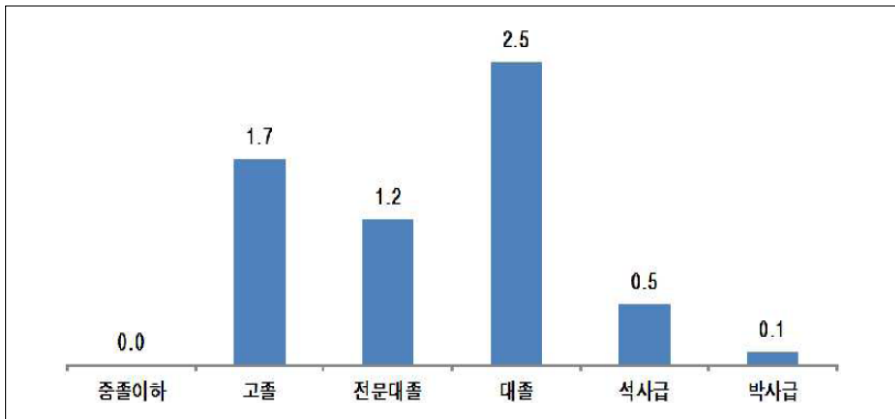
구분	생산	관리	R&D	영업	기타	합계
2011년 근무인력 수	11.4	4.6	4.4	2.6	2.6	25.5
2011년 부족 인력 수	1.1	0.4	0.7	0.6	0.2	3.0
근무인력 대비 부족인력 비율	9.6	8.7	15.9	23.1	8.0	11.8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벤처기업의 신규채용 희망 학력은 대졸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1.7명, 전문대졸 1.2명, 석사급 0.5명, 박사급 0.1명, 중졸 이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대졸 수요가 많은 가운데, 소프트웨어개발에서 대졸 수요자가 가장 많았으며, 통신기기/방송기기와 음식료/섬유/(비)금속은 고졸 수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2-3〕 벤처기업 신규채용 희망 학력 현황(2011년)

(단위: n= 1,54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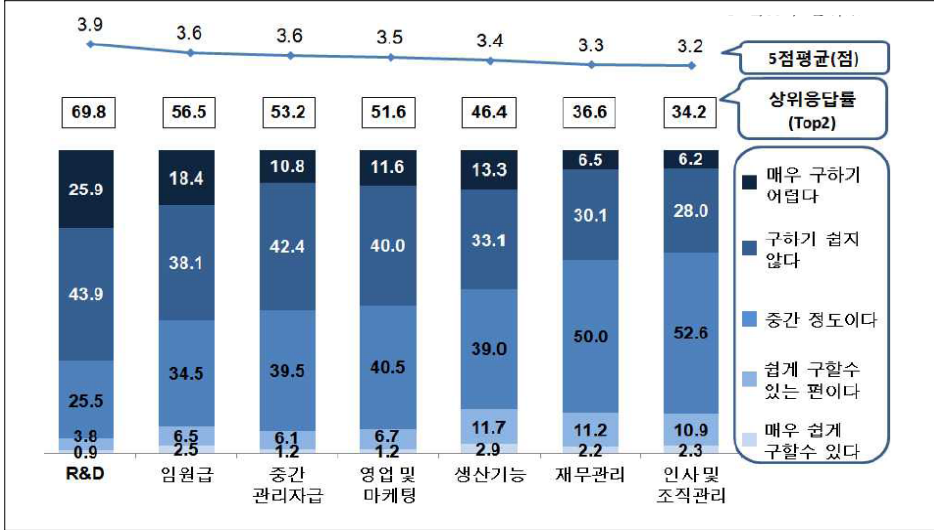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벤처기업의 인력확보 애로 직종은 R&D가 6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원급 56.5%, 중간관리자급 53.2%, 영업 및 마케팅 51.6%, 생산기능 46.4% 등의 순이다.

[그림 2-4] 벤처기업 인력 확보 애로 직종(2011년)

(단위: n=2,034, %)



자료: (사)벤처기업협회(2012. 11)

제 3 절 창업생존율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창업한지 2년 만에 1/3이 폐업하고 5년 후에 60%, 10년 후에 76%가 폐업해 10년을 지나 살아남은 기업의 비율은 24%였다. 2000년에 창업하여 2010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산업별 생존율 추이를 살펴보면 <표 2-19>와 같다. 제조업은 창업 3년 후 생존율 77%, 5년 후 생존율 62%, 창업 10년 후 생존율이 44%로 전체 창업기업 생존율, 55%, 39%, 24% 보다는 현저한 차이가 높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창업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생존율이 각각 53%, 37%, 22%로 전체 창업기업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업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생존율이 각각 59%, 44%, 28%로 전체 창업기업보다 소폭 높은 편이고, 혁신형기업도 각각 63%, 48%, 32%로 전체 창업기업보다 높다. 규모별 창업 생존율 추이를 보면 1인기업의 창업 후 3년, 5년, 10년 후 생존율은 각각 56%, 42%, 26%로 전체 기업 생존율 55%, 39%, 24%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인 이

상 5인 미만기업의 창업 후 3년, 5년, 10년 후 생존율은 각각 53%, 38%, 22%로 전체기업 생존율 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고, 5인 이상은 69%, 53%, 38%로 전체기업 생존율 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 5인 이상의 규모 있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창업 생존율 추이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기업 생존율 추이는 차이가 거의 없다.

조직별 창업 생존율 추이를 보면 개인기업의 창업 후 3년, 5년, 10년 후 생존율은 각각 53%, 37%, 22%로 전체기업 생존율 55%, 39%, 24%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법인기업의 창업 생존율 추이는 창업 후 3년, 5년, 10년 후 생존율은 각각 80%, 66%, 56%로 나타나 전체기업 생존율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기업가적 창업 지원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19〉 창업기업의 생존율 추이

구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전체	생존율	1.00	0.84	0.67	0.55	0.46	0.39	0.34	0.30	0.26	0.25	0.24
	폐업율	0.00	0.16	0.33	0.46	0.54	0.61	0.66	0.71	0.74	0.75	0.76
산업별	제조업	1.00	0.97	0.87	0.77	0.68	0.62	0.56	0.50	0.45	0.43	0.44
	서비스	1.00	0.80	0.66	0.53	0.44	0.37	0.32	0.28	0.25	0.24	0.22
	1인창조	1.00	0.87	0.71	0.59	0.50	0.44	0.39	0.34	0.30	0.29	0.28
	혁신형	1.00	0.89	0.75	0.63	0.54	0.48	0.42	0.37	0.33	0.32	0.32
규모별	1인	1.00	0.84	0.67	0.56	0.48	0.42	0.37	0.32	0.29	0.28	0.26
	5인 미만	1.00	0.83	0.65	0.53	0.44	0.38	0.32	0.28	0.25	0.23	0.22
	5인 이상	1.00	0.93	0.81	0.69	0.59	0.53	0.47	0.42	0.39	0.39	0.38
지역별	수도권	1.00	0.84	0.67	0.55	0.46	0.39	0.34	0.29	0.26	0.25	0.23
	비수도권	1.00	0.84	0.67	0.55	0.46	0.39	0.34	0.30	0.27	0.26	0.24
조직별	개인	1.00	0.83	0.66	0.53	0.44	0.37	0.32	0.28	0.25	0.23	0.22
	법인	1.00	0.97	0.89	0.80	0.72	0.66	0.61	0.56	0.53	0.57	0.56

자료: 창업진흥원(2012a)

끝으로 서비스업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창업 후 3년, 5년, 10년 후 생존율은 55%, 40%, 24%로 전체기업 생존율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다만 음식점

및 숙박업은 창업 후 3년, 5년, 10년 후 생존율이 43%, 27%, 13%로 전체기업 생존율 55%, 39%, 24% 보다 현저한 차이로 낮았다(〈표 2-20〉 참조).

〈표 2-20〉 서비스업종의 평균 생존율 추이

구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서비스업 전체	1.00	0.80	0.66	0.53	0.44	0.37	0.32	0.28	0.26	0.24	0.22
도소매	1.00	0.84	0.67	0.55	0.46	0.40	0.35	0.30	0.27	0.26	0.24
음식점 및 숙박업	1.00	0.78	0.57	0.43	0.33	0.27	0.22	0.18	0.15	0.14	0.13

자료: 창업진흥원(2012a)

다음에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가 583만 개인사업자(2001~2012년) 정보를 분석한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38.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말 28.2%를 기록했고 자영업자수는 2002년 798.8만 명에서 2011년 말 684.7만 명으로 감소했다.⁵⁾ 연령대별 자영업자 수는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1년 50대가 추월하였고 60대 이상 고령층도 증가했다. 2011년 50대 자영업 비율은 30%를 돌파하여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60대까지 포함시 중·고령층 비중이 절반을 상회했다. 50대 자영업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한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재취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한 데 기인한다. 2002년 이후 2012년까지 373.5만 개의 신규창업이 이루어졌으며, 동 기간 중 휴·폐업 업체는 346.5만 개에 달하여 연간 평

5)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2010년 28.8%)은 OECD 평균(15.9%)보다 월등히 높으며, 우리보다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3개국에 불과하다.

균적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1/3이 넘는 72만 개가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 개인사업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 개인사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1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최근경제동향』, (2013. 3))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12년 571.8만명으로 취업자 대비 비중은 23.2%이다. 자영업자의 54.5%는 50대 이상 장년층이고 1~4인 규모의 영세자영업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은 짧은 준비기간, 소규모 자본⁶⁾으로도 손쉽게 창업이 가능해 창업률이 높은 반면, 시장포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폐업률도 높다(전체 85%, 제조 80.4%, 소매 89.3%, 음식 94.3%).

〈표 2-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현황

(단위: 만 명, %)

	총계 (A)	신규 (B)	(비중)	창업률 (B/A)	폐업 (C)	(비중)	폐업률 (C/A)	창업대비 폐업(C/B)
전체	517.8	99.4	100.0	19.5	84.5	100.0	16.3	85.0
농림어업	5.5	0.5	0.5	9.5	0.5	0.5	8.3	87.2
제조업	36.6	4.9	4.9	13.4	3.9	4.7	10.8	80.4
도매업	43.7	7.5	7.5	17.1	6.5	7.7	14.9	87.4
소매업	77.9	20.3	20.4	26.1	18.1	21.5	23.3	89.3
건설업	27.6	5.3	5.4	19.3	4.1	4.9	19.5	77.7
음식업	62.1	18.9	19.0	30.5	17.8	21.1	28.7	94.3
숙박업	3.5	0.7	0.7	20.1	0.6	0.7	16.3	80.9
운수	49.8	6.8	6.8	13.6	5.9	6.9	11.8	86.5
부동산	114.4	11.7	11.7	10.2	7.5	8.9	6.5	64.2

자료: 국세청, 『'11년 국세통계연보』

6) 창업준비기간 6개월 미만 전체 60.4%, 음식숙박 72.5%, 소매 69.8%

신규자영업자 창업자금 규모('12. 8월) 500만원 미만 35.1%, 500~2,000만원 22.3%

제 4 절 창업 실태의 문제점

이상에서 창업의 실태와 생존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종합요약의 관점에서 현행 창업실태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보상측면에서 창업 인센티브의 약화로 기술기반형 창업 침체이다. 저성장, 경쟁심화,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수요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창업을 주저하는 경향이 높다. 창업과 기업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대기업 납품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로 가격과 물량 양쪽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창업의욕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영업 부문에 인력이 과다 집중되어 있고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가 높다. 삼성경제연구소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에 따르면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2011년 12월 말 기준 662만 9,000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약 229만명의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다.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사양화되고 있거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 수는 약 170만명으로 추산된다. 소득 향상과 전업 기회가 제약된 생계형 자영업 계층은 ‘과잉 공급→사업 부진→부채 증가→생활불안 초래→신규 자영업 재진입→과잉 공급’의 악순환에 봉착된 실정이다.

둘째, 숙련측면에서 창업에 필요한 능력과 준비가 부족하다.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초·중·고·대학·대학원)에서 창업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 있음’이라는 응답은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17.2%에 불과하고 80.2%가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7) 양현봉·박종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표 2-22〉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

(단위: %)

생계유지를 위해서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업 승계를 위해서	기타
80.2	17.2	1.6	1.1

자료: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셋째, 정보측면에서 창업자와 창업아이템에 관한 정보부족도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창업에는 인력과 자금의 외부조달이 필수적이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창업자에 대한 불신과 정보부족으로 필요한 인력과 자금의 조달이 곤란하다. 창업예비군들의 관심이 혼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창업 아이템에만 집중되어 사회적 필요와 성공가능성이 보다 높은 소셜벤처와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제 3 장 창업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 1 절 창업지원정책의 현황

1. 창업 역량 강화 정책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및 훈련관점에서 역량강화 정책이다. 정부는 초·중·고·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운영학교를 전국에 124개교(2012년)를 선정하여 청소년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업 교육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다.

〈표 3-1〉 연도별 비즈쿨 선정 학교 수 및 지원 대상 수

연도	'11년	'12년
선정 학교 수	100개교	124개교
지원대상	11만 5천명	12만명

자료: 중소기업청(2012a)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특성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4년부터 전국 5개 창업대학원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울권에는 호서대, 경기권은 중앙대, 충청권은 한밭대, 경상권은 경남과기대, 전라·제주권은 예원예술대를 지정하였다. 5개 창업대학원의 지원 규모는 초기 연도부터는 연 20억원을 지원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자립화 목적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2012년에는 연 9억원(대학원당 평균 1억 8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 연도별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수 및 성과

연도	운영기관	창업현황(명)	고용현황(명)	평균고용(명)
2010년	26개	406	426	1.0
2011년	27개	307	335	1.1
2012년	33개	2012. 6. 현재 1,200명 교육중		

자료: 중소기업청(2012a), 중소기업청(2012b)

둘째,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이다.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지정 및 육성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교육과 산업수요간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생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정 수는 전국 51개 대학(기술혁신형 14개, 현장밀착형 37개)과 30개 전문대학(산학협력 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을 선정하였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은 1차년도('12년)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는 1,639개, 참여 학생 수는 355,941명, 참여 교원 수는 8,435명이다. 대학당 평균 참여학과 32개, 학생 수 6,979명, 교원 수 165명이다. 또한 61개 대학(전문대학포함)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창업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창업 성공률 제고 정책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성공률 제고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 산학협력, 창업컨설팅 사업이다. 정부는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보육, 산학협력, 창업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과 지식창업 촉진에 국정 과제의 초점을 두었다(관계부처 합동, 2012).

이를 위해 창업환경 개선 및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체계 구축에 노력하여 왔는데, 창업 환경 개선측면에서는 World Bank 평가에서 창업 환경 순위가 2011년에

는 24위로, 2010년 60위, 2008년 126위 대비하여 고속 상향되었다.⁸⁾ 또한 “1인 창조육성법” 제정(’11. 4), 창업보육기능 확충(’11), 창업자 연대보증제도(’12. 2) 개선을 통해 양호한 창업 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3-3〉 World Bank 평가 창업 환경 순위

’08년	’10년	’11년
126위	60위	24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2)

둘째, 재택창업 시스템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창업 기업 설립의 시간 단축 및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였다. 재택창업 시스템은 창업 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기관방문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쉽게 회사를 설립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창업 기업 설립 신고 시스템이다. 재택창업 시스템을 활용한 창업기업 수가 2011년에는 전년대비 66% 증가하였다.

〈표 3-4〉 재택창업 시스템 활용한 창업기업 수

’10년	’11년	’12년(8월)
1,005건	1,673건	1,603

자료: 중소기업청(2012a)

셋째, 창업기업 부담금 감면 연장, 즉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공공시설수익자 부담금, 대체 조치 조성비 중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넷째,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대상·상환기간 등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12. 6)하였다. 창업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8) 관계부처 합동자료(2012)

위해 창업초기의 일자리펀드 및 창업기업 전용 R&D 신설, 기술사업성 위주로 정책자금 평가방식 개편, 고용창출기업에 금리우대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전국 각 거점별로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창업지원 허브기관으로 발돋움 하도록 하였다. 2011년 15개 대학에서 2012년 18개 대학으로 확대하였다.

〈표 3-5〉 창업 선도 대학 3개년 예산 및 창업율

연도	예산	지원대상	창업(창업율)
2010년	494.4억원	1,221명	872(67.7%)
2011년	479억원	1,046명	1,018(97.32%)
2012년	400억원	—	—

자료: 중소기업청(2012a)

여섯째, 대학·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였다.

일곱째, 최근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 및 앱 개발 지원을 위해 전국의 주요 대학 등에 2010년 11개, 2011년 14개의 앱 창작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1,660명의 교육생이 수료, 748개의 앱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에는 앱창작터의 추가 지정으로 전년도 교육생의 3배를 초과하는 5,074명의 교육생을 배출, 3,265개의 앱을 개발하였다.

여덟째, 창업초기투자 및 해외진출 창업기업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하여 창업초기투자를 위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조성(’12: 770억원)하여 엔젤클럽 50개 이상을 결성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창업 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엔젤 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운영(’12: 200억원)을 통해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지분을 벤처캐피탈이 인수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창업초기투자자에 따른 회수(Exit)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을 추진하여 초기 벤처·창업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

금 조달을 원활하게 유도하였다. 또한 “M&A 매칭 펀드”(’12: 300억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유망 창업기업을 M&A 하는 경우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였다.

열 번째, 창업보육 성공모델 확산 및 멘토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였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기술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 준비 공간, 1:1전담코칭, 창업실무교육, 개발 및 시험장비 제공, 정책융자금 연계 등 체계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간 400시간 이상의 업종별 맞춤형 창업실무교육 운영, 23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상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 입소한 1기 졸업자(212명)의 성과는 창업기업 212개, 매출 470억원, 고용 757명,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793건을 획득(’12. 10월 기준)하였다.

〈표 3-6〉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성과

구 분	매출액(백만원)	고용(인원수)	지재산(건수)
2011년말	17,459	550	342
2012년(10월말)	29,559	757	793
합계	47,018	—	—

주: 고용은 청년CEO 212명 포함

자료: 중소기업청(2012a)

열한번째,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2007년부터 제도화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20차례의 인증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의 수는 644개소이며,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수는 기업당 24.1명이다.⁹⁾

9) 고용노동부, 2012

3. 재도전 활성화 정책

중소기업청은 실패기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환경조성을 위해 힐링캠프(Healing Camp)식 교육과정을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수료생 대상 재창업 실무교육 연계 및 재창업 성공 스토리를 DB화하여 ‘실패의 지식자산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재창업지원 위원회”를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설치('12. 4)하여 재창업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감면 및 신규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휴·폐업시 신속한 자산처분을 위해 “유휴설비 정보 포털”을 개편하였다.

제 2 절 창업지원정책의 한계

정부는 그 동안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한계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1. 창업의 질적 측면의 한계

창업의 질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 창업, 1인 창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통계청(2012년)에 의하면 2011년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신설법인수가 2010년 대비 53.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신규법인의 대다수는 자영업과 서비스업 및 단순제조업 분야의 창업이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기술 기반의 기업가형 창업은 감소하는 반면, 생계형 창업과 1인 창업 기업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2012년)에 의하면 2011년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신설법인수가 2010년 대비 53.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신규법인의 대다수는 자영업과 서비스업 및 단순제조업 분야의 창업이다. 2011년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인증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40대가 49%, 50대가 26%, 30대 17%, 20대 0.7%로 나타나 청년들이 기술기반의 기업형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사업자등록자) 양산 중심의 정책 목표이다. 창업지원정책의 목표를 창업자수 즉 사업자등록 수에 두고 있어 창업 성공 및 사업체 유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등록 그 자체가 창업에 성공하여 일 자리를 창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이 성장하여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창업 후 기업 생존을 제고에 창업지원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양영석 · 최종인 · 황보운, 2012).

셋째, 창업활성화 생태계 조성 미흡이다. 기술창업자들에 대한 엔젤투자자 또는 은행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초기 창업자금 지원 비중이 미국 등의 해외의 비중보다 현저히 적다. 이는 2009년 OECD의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국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 미국 등은 Venture Capital 투자비율이 0.2%를 상회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0.07%에 지나지 않다.¹⁰⁾

넷째, 예비기술창업자 지원 체계의 아이템 검증 시스템 부족이다. 예비기술창업자 선발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짧은 관계로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현 선발과정은 많은 지원자들을 단기간 내에 선발해야 하는 이유로 서류심사 후 짧은 시간 내에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발굴을 통한 창업 성공 및 일자리 창출에는 다소 기여하는 바가 적을 수 있다.

다섯째, 창업보육센터의 체계적 운영 지원 미흡이다. 2010년 이후 3년 동안 총 9조 2,473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보육 센터(BI)를 통한 입지 지원 및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0) 중소기업청, 2012a.

〈표 3-7〉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년도	'10	'11	'12	총계
운영비	9,233	10,260	11,170	30,663
건립비	23,128	23,182	15,500	61,810

자료: 중소기업청(2012a)

BI 입주기업의 사업화 성과는 2009년 대비 2010년, 2011년 2년에 연속 보육업체들의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감소추세로 질적인 지원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BI 입주기업의 사업화 성과

구 분	'09년	'10년		'11년	
			증감률(%)		증감률(%)
보육업체수(개)	4,770	4,818	1.0	4,764	-1.1
매출액(억원)	25,382	24,807	-2.3	20,055	-19.2
고용인원(명)	22,017	21,112	-4.1	18,078	-14.4

자료: 중소기업청(2012a)

전국 창업보육센터 280개('11년말)의 639명의 BI 매니저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34.3%에 이르고 있어 신분상의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로 전문성 있는 보육매니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중소기업청 2012a). 단순 행정처리에 대한 업무 비중이 높고 보육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 부족으로 본연의 업무 충실도가 부족하다.

2. 창업교육의 성과 목표 및 운영 미흡

창업교육의 성과목표 및 운영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교육의 목표의 부적절성이다.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의 목적을 교

육에서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의도한 목표는 초·중·고 학생들의 역량과 업(業)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를 감안해 볼 때 비즈쿨 사업의 목표를 창업에 두는 것은 부적절함이 있다. 비즈쿨 사업의 목표치를 초·중·고 학생들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건수로 두어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면서도, 졸업 후 해당 산업계 진입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창업 교육 운영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협조 체제 구축 미흡이다. 대학생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 창업대학원 사업,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비즈쿨 사업 운영기관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은 사업관련 유관 기관 내에서만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 창업교육 사업 전체 내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는 미흡하다. 창업대학원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된 창업전문가 및 교수진들의 청소년 비즈쿨 사업 및 대학생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 내 창업교육 전문가 활용 등의 연계(Synergy) 노력을 통해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Synergy Effect) 및 창업교육의 질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창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정책의 미흡

우리나라의 실패기업인 패자부활 지원제도로는 벤처기업패자부활제도와 재창업자금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¹¹⁾ 벤처기업패자부활제도는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의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벤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2005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신청기업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신청을 해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11) 이하의 논의는 주로 백필규(2011),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에 의거.

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 시행 5년 동안 경영재기지원제도는 총 19명이 지원, 단 3명의 수혜자밖에 탄생시키지 못했다. 재창업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무잔존(신용불량)과 체납세금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창업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신용평가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2009) 창업기업 204만개 중 2011년 말 기준 폐업 기업은 107만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9만개만이 재창업하여 평균 재창업율은 8.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업체는 연간 2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 실패시 재창업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¹²⁾

이처럼 벤처기업 패자부활제도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자금을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이 제시하는 벤처재기지원제도 기술성 평가에 재무상태를 포함시키는 등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여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둘째 벤처재기지원제도를 위한 별도 홍보 예산도 없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벤처인들이 많다. 셋째 실패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실패로 끝날 때 지원기관이나 담당자의 부담이 커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가 이처럼 실패기업인들의 패자부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2010년 3월 재창업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한번 실패한 중소기업은 제도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패기업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2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제도가 지원조건이 엄격하여 수혜자가 나오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 데 그 특징이 있다.

재창업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15개 기업에 15억 200만원을 지원했

12) 이윤준 외, 2012

고, 2011년에는 89개 기업에 122억원을 지원하여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 및 사업성이 있는 실질적 재창업자 발굴에 애로가 있다.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선정자격을 완화하면서 도덕적 해이 또는 사업성이 미흡한 과거 아이টে에 집착하는 자격미달의 신청업체들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원을 해도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실패기업인들의 신용회복에 애로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금액 한도는 15억원으로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세금은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채납자의 경우 채무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신청기업들이 과거 아이টে를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일이 10년 이내인 자만을 신청하게 했으나, 이 경우 외환위기(IMF)시 부도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넷째, 부실 리스크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 불만은 현재의 지원자금이 필요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재창업자는 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큼 재창업자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가능성이 있어도 중도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실패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실패로 끝날 때 지원기관이나 담당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섯째, 실패기업인들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재기에 필요한 자기진단과 부족한 능력의 보완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불충분하다. 실패기업인들은 실패원인을 외부환경과 자금 탓으로만 돌리고 자금지원만 받으면 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족한 경영능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다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

끝으로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재창업의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창업의 경험을 통해 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사회적 자본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창업과 취업간 연계 혹은 이러한 연계가 가능한 추가적인 교육훈련이나 노동시장 인프라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제 3 절 외국의 재창업지원제도와 시사점

1. 미국의 재창업 지원 제도

미국의 연방도산법(Federal Bankruptcy Code)은 ① 채권자에게 질서 있고 형평에 맞게 변제하고, ②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새 출발(fresh start) 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채무자를 처벌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활동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희생된 피해자로 본다. 따라서 도산절차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다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로 간주된다(백필규, 2011).

파산 신고를 했거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경영 재건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재생 비즈니스(turnaround business)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78년 연방도산법의 제정을 계기로 탄생한 새로운 비즈니스이다.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성장해온 사업재생 비즈니스는 기업재생 컨설팅의 형태로 파산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재생 전문 컨설팅 회사’와 파산 기업을 매수하여 사업재생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에 매각해서 이득을 올리는 ‘사모투자회사’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백필규, 2011).

2. 일본의 재창업 지원 제도

재도전 지원제도로써 일본은 재도전 보증제도와 재도전 용자제도를 통해 재도

전 기업가를 지원한다. 재도전 보증제도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가 재창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과거 경영상황 악화로 사업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현재 개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면서 한 달 이내에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자 또는 두 달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보증을 신청할 경우, 과거 폐업한 사업에 대한 빚이 있고 회생전망이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윤준 외, 2012).

재도전지원 융자제도는 한 번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가를 재도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으로 폐업경력이 있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법인이고, 폐업 시 부채가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리될 전망이 있는 자, 폐업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다. 대출기관은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사업부,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사의 국민생활사업부이다. 대출한도는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사업부가 7억 2,000만엔, 국민생활사업부가 2,000만엔이다.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사업부가 고정금리형 기준금리를 취하고 있으며, 성공불 융자형식으로 최초 2년 동안은 0.3%이며 이후 성공판정결과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관은 고정금리형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시설자금 15년이며, 운전자금은 7년 이내, 성공불 융자형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 이내이다(이윤준 외, 2012).

3. 독일의 재창업 지원 제도

독일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영국만큼 패자부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러한 문화는 1994년 도산법에 의해서도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EU 역내에서의 도산법 적용지역 변경과 함께 최근 국경을 넘는 금융이나 상거래가 점점 활발해짐에 따라 영미형의 조기사업재생 방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7월 16일 ‘기업재건축진법안(Gesetz zur weiteren Erleichterung der Saierung von Unternehmen)’의 초안을 공표하였다(백필규, 2011).

보증제도는 독일에서는 채권자들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다른 물적 담보 제공자를 세울 수 없을 때에만 인적담보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백필규, 2011).

4. EU의 재도전 지원 정책

EU는 회원국 대표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009~2010년 2년 동안 ‘파산과 재도전’을 주제로 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파산절차를 크게 ① 예방, ② 법정 밖 화해, ③ 법정 절차, ④ 파산기업가의 대우와 재도전 조건의 네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회원국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백필규, 2011).

제 4 장 창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정책과제

제 1 절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정책의 목표 개선이다. 창업 후 기업 생존율 제고를 통해 시스템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수 뿐만 아니라 2년 또는 3년 이내 창업유지율도 정책 목표로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창업 후 3년까지 창업아이템 검증과 판로개척을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분한 창업 아이템 검증을 통한 예비 창업자 지원이 필요하다. 2012년 기준 예비기술창업자 지원 관련 금액은 약 1,100억원으로 창업사업화 지원 전체 금액중 84%를 차지한다. 이러한 큰 규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양산에는 성공했으나 일자리 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창업 아이템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기술창업자 지원 사업 실행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의 아이템 검증 교육을 통해 잠재소비자 또는 시장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예비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 아이템 디자인 센터(Idea Design Factory) 사업이 필요하다. 창업 아이템 진단 사업이란 창업 전(사업자 등록 전)에 창업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사업 타당성 점검 및 소비자 연계 및 투자자 유치 예약 후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¹³⁾ 창업 아이템 디자인 센터(Idea Design Factory) 사업의 지원 내용은 1) 창

13) 이에 대한 해외사례로는 핀란드 헬싱키의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내에 알토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알토 디자인 팩토리(aaltodesignfactory)’를 통

업사업 컨셉 검증, 2) 비즈니스 모델 검증, 3) 사업 아이템 타당성 검증, 4) 잠재 소비자 검증(시장성), 5) 잠재 투자자 연계 등이다.

넷째,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 보육센터의 보육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의 창업전문가 집단과의 전국적인 단위의 협업을 통해 보육 업무 전문성 제고 및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국내 문헌에서 언급하는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핵심 역량을 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케팅 관련 역량에서부터, 자금 및 산업재산권, 사업화 역량, 의사소통 네트워크 역량, 기업관리 역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고용 구조 하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들에게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힘든 역량들이다.

<표 4-1>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핵심 역량

요인	지식차원	스킬차원
마케팅 관련역량	- 시장조사방법 - 홍보 · 광고기법 - 마케팅 전략수립 - 수출 · 수입관련지식 - 전략적 제휴 개발 기법 - 외국어 사용	- 해외시장정보제공 - 해외 BI 및 투자자 연계 - 대외신뢰도 확보 투자자 유치 - 사업타당성 분석 - 시장 제품에 대한 타당성 검증 - 마케팅 지도
자금 및 산업 재산권 관련역량	- 산업재산권 관리 지식 - 기업 가치 평가 기법 - 벤처 금융에 대한 지식 - 투자관리 및 자금관리 세무실무	- 정책자금 활용 기법 - 기술발전 동향에 대한 이해 - 기술개발 및 이전과정절차 - 특허분쟁의 극복기법
사업화 관련 역량	- 창업관련 법규 및 절차 - 창업보육기능에 대한 이해 -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 - 계약 및 부동산 관련지식	-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 성공사례를 이용한 벤치마킹 - 창업법규숙지 - 센터관리행정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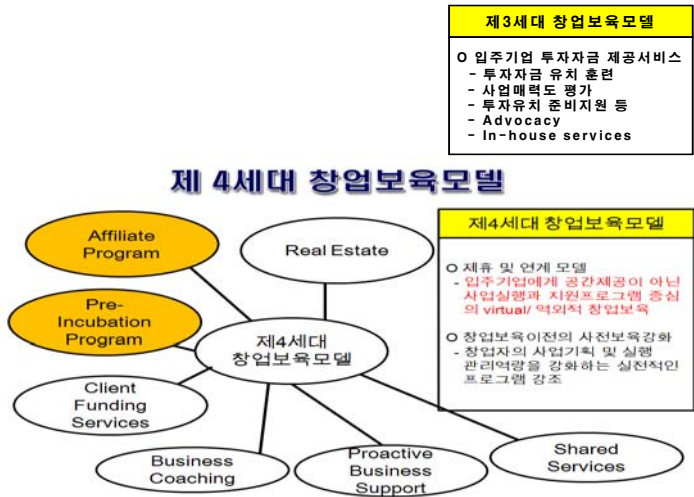
해 예술디자인, 과학기술, 비즈니스의 각 분야 학생과 연구자, 사업가 등이 융합되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숙성시켜 창업으로 이끌어내고 있다(자료: 황보윤 외, 2010).

요인	지식차원	스킬차원
의사소통 네트워킹 역량	- 상담심리 - 컨설팅기법방법론 - 일대일카운셀링기법 - 입주·졸업기업 네트워킹 구축	- 멘토로서 실무 경험 전수 -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 - 타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 - 전문가그룹네트워크 구축
기업관리 역량	- 인적자원관리·개발기법 - 기업관리 운영지식 - 기술연구소설립절차 - 재무관리지식	- 교육기획스킬 - 리더십

자료: 박만희(2011)

창업보육센터의 창업보육 매니저가 갖추어야 할 업무의 전문성의 범위는 [그림 4-1]의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제 4세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 모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 창업보육센터 협회에서 발표된 제 4세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는 행정지원서비스, 능동적 경영지원 서비스, 비즈니스 코칭, 투자 자금 지원 서비스, 제휴 및 역외기업 지원 모델, 사전 보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황보운 외 2010).

[그림 4-1] 미국의 제 4세대 창업보육 모델



출처: NBIA Preconference, “Fundamentals of Incubator Management.” 2010.

다섯째,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창업 Boom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엔젤 투자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엔젤투자자 소득공제율을 기존 투자금액의 20%에서 40%~50%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엔젤투자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주식 의무보유기한 3년을 1년 6개월~2년으로 축소하고, 엔젤투자자의 종합소득신고시 투자 실패금액을 손실금액으로 인정하며, 종합소득금액 공제기간도 투자 이후 과세 기간 동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 엔젤투자자들의 회수(Exit)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생태계 발전을 위해 KONEX(Korea New Exchange) 시장의 조기활성화 및 중간 회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초기 벤처·창업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을 조기 활성화하여 엔젤투자 생태계를 대폭 개선시켜야 한다. 엔젤투자자들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M&A 매칭 펀드” 조성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제

1.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

제대로 준비 안 된 창업으로 실패자만 양산하는 현재의 창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구 쪽에서 패자부활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입구 쪽에서 체계적인 창업훈련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현실의 창업을 보면 베이비부머들의 창업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도 준비 안 된 창업들이 많다. 준비 안 된 창업은 당연히 실패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실패한 창업자는 재기가 어려워 결국 영원한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 커리큘럼에서 창업교육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은 이제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과목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50세도 되기 전에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현실이고,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시기만 문제일 뿐 누구나 한번은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직장 퇴직 이후에도 수십년간의 생이 남아 있는 고령화 시대에는 창업훈련은 생존을 위한 필수무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업진흥원(2012b)의 ‘2012년 기술창업 폐업 및 재창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이 처음 창업시 필요 창업교육 부문은 ‘창업 아이템’이 41.5%, ‘창업자금’ 39.5%, ‘기업경영일반’ 6.8%, ‘기업설립’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창업시 필요 창업교육 부문은 ‘창업아이템’이 43.3%, ‘창업자금’ 31.7%, ‘기업경영일반’ 8.3%, ‘기업설립’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초 창업시와 재창업시 모두 필요한 창업 교육 부문의 최대 선호 부문은 ‘창업아이템’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시 창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창업지원 정책과 창업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경제 교육 또는 기업가 정신 교육들에서 창업 아이템을 포착해 내고 이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전 분야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창업 정책이 제대로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창업인프라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즉 기술 교육 훈련과정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중 ‘기획 포착 교육’과 ‘기술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 ‘소비자 수요 조사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기술 습득 교육에서 그 기술을 활용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 검증 교육으로 확대하면 기술 교육 훈련 과정에서 얻게 된 사업 기회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창업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체득한 기업가정신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지만 특히 중소기업을 가는 사람에게는 창업관련 교육훈련은 더욱 더 필요하다. 이런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기대는 직장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창업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창업마이스터제의 도입¹⁴⁾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에 앞서 창업에 필요한 숙련을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종업종의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가령 5~10년)하고 소정의 창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창업마이스터’의 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을 이들에게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high-risk high-return의 창업을 하기보다는 low-risk low-return의 창업단계를 거쳐 medium-risk medium-return, 그리고 high-risk high-return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창업희망자들은 중소기업 근무를 통해 교육이나 창업동아리 활동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숙련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창업마이스터’를 통한 경력형 창업의 활성화는 창업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높은 생애보상을 기대하는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효과적이다. 당장 줄 수 있는 보상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우수인력들을 올 수 있게 하려면 미래비전을 통한 생애보상이 중요하다. ‘창업마이스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창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큰 지원을 한다면 높은 생애보상을 기대하면서 창업을 위한 훈련의 장소로

14) 백필규·김선우·표한형(2010),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 정책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인용.

서 중소기업에 입사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이들은 중소기업 근무기간을 사업준비 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업무에 임할 것이고 이는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일자리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기업·연구소기업의 전면 활성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창업의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인데,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는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고성장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의 『이공계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공계박사 재직자의 직장유형별 분포는 대학 47.4%, 공공연구소 28.7%, 기업 20.8%이다. 그러나 이런 잠재력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고급인력들은 고용안정성과 온실속의 연구에만 관심있을 뿐 창업의 모험은 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의 고급인력들이 대학교수가 되기보다 벤처창업을 선호하고 독일의 정부연구소의 고급인력들이 고용보장이 안 돼 스피노프 창업의 모험을 선택하는 것과 대비된다.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70%의 고용률을 목표로 한다면 대학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 대한 지원에서도 예컨대 대학에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평가에 대학의 교수창업과 학생창업으로 매년 창출된 일자리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 등 창업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창업지향적으로 바뀐 대학이나 출연연구소가 제대로 된 창업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창업교육은 강의실보다는 실제의 사업경험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대학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성장의 기술

창업과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기업의 활성화는 현재 연구중심대학도 아니고 교육중심대학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많은 대학들을 교육중심대학 내지는 기업지향 대학으로 전환시키는 핵심동력으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칭화대 샤오반기업

☐ 성과

- 샤오반 기업(학교기업)은 대학들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1980년대 초 중국정부가 학비 충당을 위해 대학에 기업설립을 허용하면서 시작되어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과 응용기술 연구를 통해 중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많은 대기업들을 배출
- 칭화대 샤오반기업은 2009년 자회사 28개·자산 7조 5,000억원의 기업그룹, 지주회사 칭화홀딩스는 291억위안(4조9,470억원)의 매출에 6억9,700만위안(1,184억원)의 영업이익, 직원 수 2만명 이상
 - 대학 바로 옆 ‘칭화사이언스파크’라는 산학협력단지에 400여개 기업, 3만5,000여명 입주

☐ 성공요인

- 기업과 대학의 상생: 기업은 대학의 인재나 연구시설을 활용하면서 성장해 여기서 생긴 이익을 대학에 환원하여 재정에 기여
- 우수인력 유입: 대학생들은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기보다는 원하는 연구를 하면서 수입이 훨씬 더 나은 샤오반기업을 더 선호(급여 2배 이상)
-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교수와 학생의 기업근무 허용, 세제혜택, 테크노파크, 창업원이 공동출자하여 교수나 학생의 창업을 지원

4. 창업자 이력시스템과 창업아이템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혹은 고성장기업을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며 정책지원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창업자의 이력과 활동정보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창업자 이력DB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의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우수인력 유입의 필요조건이고, 공개된 창업자 이력DB는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자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와 정책지원을 연계하여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기업형태로 창업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가들에게 동기부여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창업성공모델 DB의 구축도 필요하다. 창업가능한 산업은 제조업, IT, BT산업뿐만 아니라 뷰티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문화산업, 복지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만큼 제조업과 ICT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고성장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형태도 전통적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LLC, 커뮤니티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정보 및 성공사례에 대한 DB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창업정보와 창업성공모델 DB의 구축은 창업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5.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시

창업실패자 또는 재창업 희망자가 취·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노동시장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창업 및 재도전을 위한 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이 아닌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유관분야로의 취업알선 등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추어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고용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취·창업성공 수당 지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¹⁵⁾

패자부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패의 이전, 전후, 이후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실패기업인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재기에 필요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부도나 폐업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위기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보호기능을 제공함과 아울러, 불가피하게 부도나 폐업을 맞이한 중소기업인에게는 재기에 필요한 전문적 조언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¹⁶⁾

첫째, 부도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를 맞이한 기업인이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는 채권자의 협박 등으로 야만도주나 자살 등 비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일시적 피난장소가 필요하다. 셋째, 실패 중소기업인들의 실패원인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실패 중소기업인들에게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이나 재기

15) 이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촉진 및 빈곤탈출 촉진을 독려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의는 백필규(2011),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의 패자 부활센터의 기능을 확장한 개념이다.

16) 매년 다수의 부도기업인과 폐업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보호-진단-교육-지원-활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실패 중소기업인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패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실패자의 경험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담-보호-진단-교육-데이터베이스-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패자부활지원기능이 필요하다.

에 필요한 마인드나 지식 등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실패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패정보의 축적과 진단,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교육을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가 축적되면서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재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실패 중소기업인이 취업이나 사업재개에서 현실적 장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을 장애인 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인건비 및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당면한 생계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실패 중소기업인끼리 함께 사업하는 경험을 통해 기존의 경영실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재기에 필요한 본격적인 자금지원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보가 축적되고 실패요인이 보완되었다고 인정된 기업인에 대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창업을 하여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실패의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실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약화경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창업경험을 살려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경험과 중소기업의 혁신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창업경험 활용형으로 재구축하여 관련 분야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2012), ‘2012년판 고용노동백서’.
- 관계부처 합동(2012. 5. 16),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 방안’, 보도참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대학 산학협력백서’.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기획재정부(2013),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최근 경제동향”, 2013. 3.
- 박만희(2011),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심사지표와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필규(2011),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백필규 · 김선우 · 표한형(2010),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 정책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벤처기업협회(2012), ‘2012 천억벤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 _____ (2013. 2), ‘벤처기업현황’, 중소기업청.
- _____ (2012. 11), ‘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 삼성경제연구소(2012),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CEO Information 제840호.
- 양영석 · 최종인 · 황보운(2012), ‘질 좋은 창업육성 시스템 구축방안’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012. 6.
- 양현봉 · 박종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이윤준 · 정기철 · 장병열 · 김선우 · 이민규 · 김영훈 · 김서균 · 정우진 · 이승호(2012),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29~30.
- 중소기업연구원(2012. 12), ‘역대 벤처기업 육성정책 비교 연구’.

중소기업중앙회(2012. 12), ‘2012년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진흥원(2010),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2012a), ‘2012년 일자리 과제 종합평가 추진 실적’.

_____ (2012b), ‘2012년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창업진흥원(2012a), ‘창업기업이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소기업청.

_____ (2012b), ‘2012년 기술창업폐업 및 재창업 실태 조사’, 중소기업청.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개인사업자 창 · 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통계청(2012), ‘기업생멸 행정통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이공계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

허 식(2012), “창업기업이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
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2013), ‘창조형 창업이 없다! 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황보윤 · 양영석 · 조인석 · 이일한 · 설병문(2010), ‘청년 창업요람 개발 및 창업
교육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창업진흥원.

佐藤博樹 · 玄田有史編(2003). 『成長と人材一伸びる企業の人材戦略』. 勁草書房.

Acs, Z. J. and Parsons and S. Tracy(2008). “High-Impact Firms: Gazelles Revisited”,
SBA Report. Washinton, D.C.: SBA Office of Advocacy.

Birch, D. L.(1981). “Who Creates Jobs ?” The Public Interest 65.

Birch et. al(1994). “Gazelles”, in Lewis, Solomon and Levenson(eds.), pp.159 ~ 167.

NESTA(2009). “The vital 6 per cent: High-growth innovative business generate Prosperity
and Jobs”, October 2009, NESTA.

OECD(2002). High-Growth SMEs and Employment.

_____ (2008). Employment Outlook.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전체 과제 리스트〉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01-01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01-02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혁신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3-01-03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01-04	창조경제 기반의 농업·농촌 신성장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1-05	창의적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성장동력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13-01-06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3-01-07	창의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01-08	에너지 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13-01-09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1-10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13-01-1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추 도시권 발전과 도시재생 융합 방안	국토연구원
13-01-12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 발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3-01-13	해양수산 창조경제 구현 과제와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01-14	기술—문화—산업의 융합행정을 위한 정책(부처)간 협력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3-01-15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융합촉진 법제 및 규제 선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3-01-16	창조, 융합, 안전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도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01-17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3-01-18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3-01-19	여성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1-20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훈련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01-21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3-01-22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 평가 패러다임 전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01-23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01-24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3-01-25	신흥경제권과의 새로운 산업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01-26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 저 자 소 개 ●

이 규 용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박 성 재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백 필 규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 보 윤

· 호서대학교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3-01-18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2013년 6월 25일 인쇄

2013년 6월 25일 발행

발행인 박진근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

TEL: 02-571-0002 FAX: 02-572-4092

인쇄 인성문화

ISBN 979-11-85196-09-1 94320

ISBN 979-11-950021-1-5 (세트)

〈비매품〉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비매품



9 791185 196091

ISBN 979-11-85196-09-1
ISBN 979-11-950021-1-5 (세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
www.nracs.re.kr